

토 론 요 지 4

정 혁 수 차장 (경향신문)

건강한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로부터 시작된다. 새로운 민선 자치가 계속되면서 이러한 '지역으로부터의' 변화에 대한 욕구가 크게 증대되고 있고,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 검토 필요성도 그 못지 않게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추세는 아직까지 질적 도약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민선 단체장들이 주민들의 논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것이 긍정적 가능성이라고 본다면, 그 과정에서 실질적인 내용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또 다른 한계라 할 것이다.

생활 주변에서 주민들이 '자치'를 경험해 보는 기초단위로는 '주민자치위원회'를 꼽을 수 있겠다. 지역 주민들의 현안과 마을화합을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고, 행정기관을 대신해 구성원간 갈등을 조정하고 화해를 이끌어 내는 것이 주 기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목격하게 되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과 구성원들의 면면을 보면, 이러한 취지와는 큰 차이를 보게 된다.

대전시 동구 한 주민자치위원회를 살펴보면, 치과원장, 안경원 대표 등 일부를 제외하면 전체 구성원 절반 이상이 정당, 관변단체와 관련된 사람들이거나, 지방의원 출마경험이 있는 이들이 활동하고 있다. 또 미래 선출직에 관심이 있는 이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마을 현안사업을 놓고도 구성원간 자신이 속한 집단이나 단체에 따라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리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주민들의 화합을 이끌어 내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오히려 마을의 갈등을 생산해내고 있는 모습이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원들이 그 지역과 주민들의 대표성을 지니고 있느냐 하는 것도 문제다. 상당수가 이미 주민자치위원회 소속 가맹단체장을 맡고 있거나, 또는 가맹단체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기존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터로 이름을 바꾼 데에는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높이거나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뜻이 있었다. 그러나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을 보면, 과거와 같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외에 취미활동과 동아리활동 위주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으로서 주민자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스스로 지역의제를 만들어 가야 하는 노력이 필수적이지만 지금과 같은 주민자치센터의 위상으로서는 그러한 취지를 구현해내기 쉽지 않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일고있는 주민자치 실험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충남 홍성군 홍동면 운월리 홍동마을은 예전 ‘오리유기농법’으로 유명한 곳이었다. 또 생태교육, 생명교육, 공동체교육을 골자로 한 ‘풀무학교’가 자리한 지역이기도 하다. 하지만 요즘은 ‘활력있는 마을’로 새로운 공동체 문화를 실험하는 명소가 됐다.

마을기업인 ‘마을활력소’를 중심으로 친환경농업과 공동체 대안학교를 포함해 10여개 마을조직이 자리잡아 주민 스스로 마을을 가꾸고 있다. 인식의 변화를 통해 마을의 변화를 일구어 가고 있는 것이다.

주민들이 갖고있는 재능과 가능성을 ‘자산’으로 삼아 사업 아이템을 만들어 내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 낸 일자리에 놓고있는 일손을 투입해 상생의 기회를 제공했다. 또 이를위한 다양한 교양강좌와 교육을 제공해 그러한 변화를 공유하고 스스로 준비하도록 유도했다.

▲마을자립지원센터 운영 ▲홍동마을 그린투어리즘 코스 개발 ▲지역 자생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사업 ▲주민 주도의 비즈니스 창출 ▲커뮤니티비즈니스 전문가 교육과 컨설팅이 그러한 사례들이다.

결국 근린자치라고 하는 문제는 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시스템과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또 구성원들의 의식이 바뀌어 저야 가능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지금과 같은 행정기관(중앙과 지방단체) 중심의 자치가 아닌 구성원들의 참여와 역할확대를 통해 다양한 자치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교육과 지원, 또 이러한 내용을 공유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